

상위법령 개정 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0
----------	------

제출연월일: 2018. 8. 23.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해당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나.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2조)

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3조)

3. 근거법규: 4개 관련법령(법령 3, 시행령 1)

「소음·진동관리법」, 「지방회계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를 “「소음·진동관
리법」 제4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36호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
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52호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환경위생과)

현행	개정안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u>소음·진동관리법</u>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를 준용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현행	개정안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이하 “ <u>구금고</u> ”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영 제74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비를 지원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 제8호-----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보건행정과)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 ----- -----.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

정 2012. 8. 23., 2014. 2. 5., 2017. 1. 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 1. 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6. 27.]

「정신건강복지법」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

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